



팔레스타인 & 레바논
2, 12면

에이치엠엠나무호
피격
3면

영국 지방선거
4, 5면

지방선거
8, 9면

새삼 드러난
윤석열 계엄의 잔혹성
9면

말기 암 난민의
마지막 소원
10면



팔레스타인의 나크바 집중 행동의 날에 함께하자

5월 17일(일) 오후 2시
서울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

(안국역 1번 출구)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관련 기사 2면



나크바 78주년 포럼

팔레스타인 점령, 억압, 해방의 방법을 토론하다

5월 9일 나크바 78주년 포럼 '나크바, "현재 진행형" —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에서 이란 전쟁까지'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 주최로 열렸다.

'나크바'는 아랍어로 대재앙을 뜻하는 말로, 1948년 시온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80만 명을 강제 추방한 사건이다.

행사장의 열기가 높았다. 120명 넘는 참가자들로 행사장이 가득 차는 바람에, 늦게 온 참가자들이 바닥에 앉기도 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팔연사 운동에 꾸준히 참가해 온 사람들 외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참가했다. 거리와 대학에서 홍보를 접하고 온 새로운 팔레스타인인들도 있었다. 다양한 이주 배경의 참가자들과 대학생들의 참가도 두드러졌다.

강연장 입구에서는 《가자 전쟁》, 《완벽한 피해자》, 《팔레스타인의 저항》 등 팔레스타인 관련 도서를 판매했고 호응이 좋았다. 책을 구입해 강연 시작 전부터 읽어 보는 참가자들이 여럿 있었다.

뜨거운 박수 속에 포럼이 시작됐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교사들'에서 활동하며 수백 회의 평화 수업 등으로 활약해 온 권오균 교사가 사회를 맡았다.

지난 2년 반 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참여해 온 살라흐엘딘 엘게빌리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부교수가 첫 발제자로 나섰다.



팔레스타인인, 여러 이주 배경의 사람들, 대학생 등 참석자들의 열중도가 높았다

살라흐엘딘 교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배 과정과 이에 맞서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의 역사를 짚었다. 이스라엘이 점령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랍 국가들의 부패하고 억압적인 지배 엘리트들 덕분이라고도 지적했다.

“아랍 국가 지배자들의 역할은 자국민을 구금하고 정치적 제약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아랍인들이 자유를 위해 나선다면, 지배자들에 맞서 저항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협정을 비롯한 ‘평화 협정’들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어떤 권리도 보장하지 못해 왔으며, 희망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있다고 살라흐엘딘 교수는 강조했다.

이어서 팔레스타인인인 나리만 루미 팔연사 공동 간사가 마이크를 넘겨

받아 에너지 넘치는 연설을 했다.

나리만 공동 간사는 점령 하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처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했다.

이스라엘군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겪은 비인간적 고초, 검문소가 3일간 막혀 산을 타고 등교하다가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은 경험, 사실상 인질인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들의 처지 등 그녀가 전하는 팔레스타인의 현실에 참가자들은 귀를 기울이며 함께 분노했다.

쟁취

그녀는 팔레스타인이 ‘임자 없는 땅’이었다는 이스라엘의 프로파간다를 반박하고, 하마스 등의 무장 저항을 비난하는 서방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유럽이나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점령이 불법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행동으로 이를 뒷받침한 적은 없습니다. ... 하마스 등의 10월 7일 공격은 우리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심정을 보여 준 것입니다.”

청중 토론에서도 진지하고 흥미로운 주장이 오갔다.

한 대학생 참가자는 시온주의 프로젝트가 제국주의의 도움으로 유지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낳은 위기와 생계비 고통을 이용해 행동을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 이집트인 참가자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이집트와 요르단의 독재 정권들에 맞서 그 나라 대중이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해방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을 정리하며 두 발제자는, 해방은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민중이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랍 민중, 전 세계 대중이 해방을 얻고자 한다면, 스스로 해방을 쟁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배워 온 교훈입니다.”(살라흐엘딘 교수)

“해방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해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면서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 열리는 많은 집회에서 다시 뵙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나리만 공동 간사)

두 발제자의 정리 발언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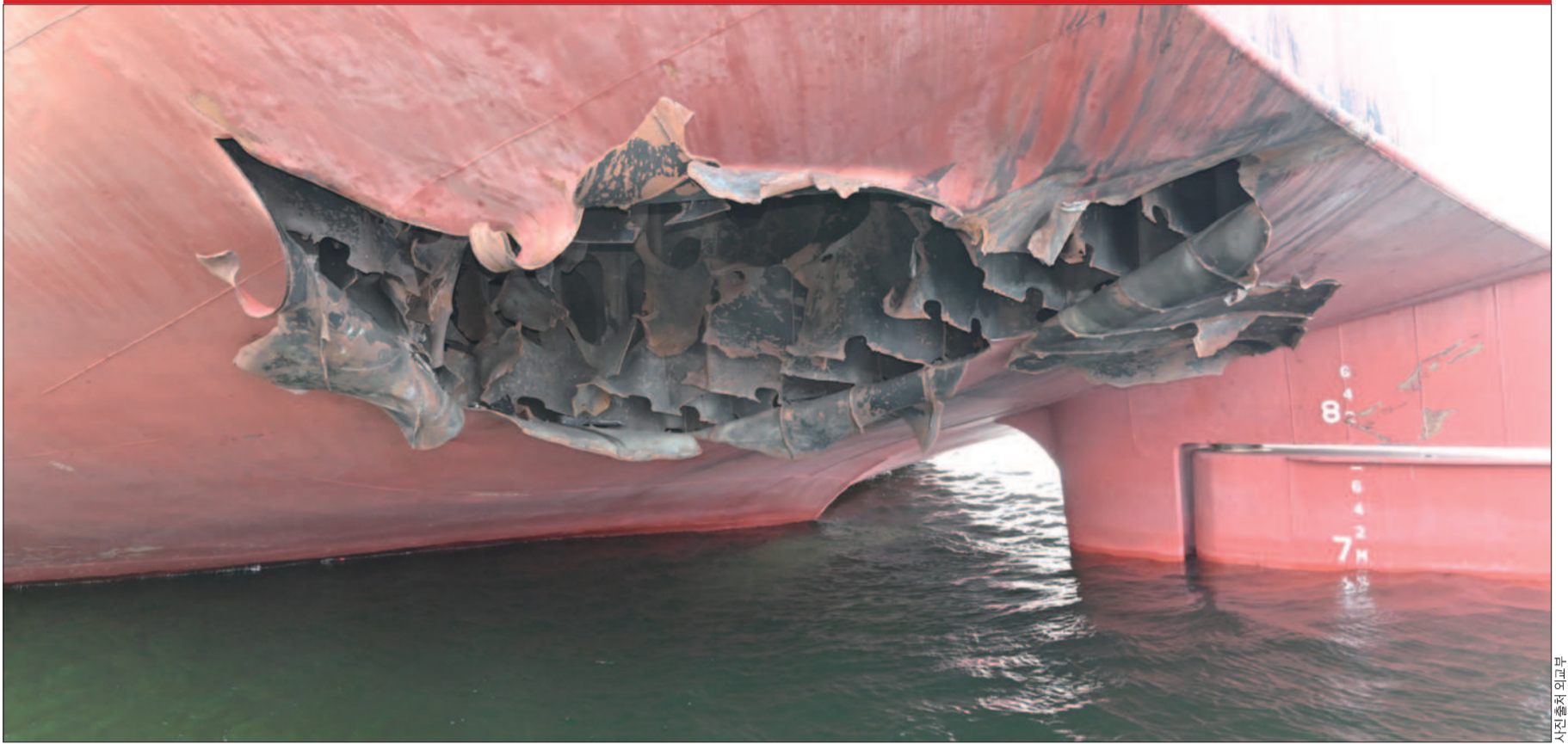
포럼을 마치며 사회자는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열리는 ‘나크바 78년 집중 행동의 날’ 집회로 오늘의 열기를 이어 가자고 호소했다.

5월 15일 오후 6시 30분에는 신촌역 3번 출구 앞에서 ‘나크바의 날 대학생 집회와 행진’도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 네트워크’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임준형



참가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출처: 외교부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해양자유연합' 참여를 둘러싼 여론을 간 보고 있다

나무호 피격으로 난처하게 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이재명 정부는 에이치엠엠나무호(이하 나무호)의 피격이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이재명 정부는 나무호 공격의 주체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이 때문에 이란을 타격 주체로 시사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이란 대사 호출이 “초치”가 아니라 “소통”이라고 했다.

그러자 국힘 대표 장동혁은 정부 조사 결과에서 “이란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비난했다. 국방위 소속 국힘 의원들은 “지금 상황을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호들갑스럽게 촉구했다.

우익 언론들도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조선일보》 5월 12일자 사설) (《문화일보》)는 더 나아가 파병을 촉구했다. “아덴만 배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장, 국회 파병 동의 이전의 비전투 인력 파견 등도 검토할

때다.”(5월 11일자 사설)
 나무호는 트럼프가 ‘해방 프로젝트’를 개시하겠다고 밝히고, 이란이 미군의 호르무즈해협 진입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피격됐다. 나무호 피격 전후에 카타르·프랑스·중국 관련 선박들도 공격받았다. 이런 정황 때문에 한국 선적을 겨냥한 의도적 공격이라기보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 행동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론 트럼프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시도는 민간 선박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또 하나의 전쟁 도박일 뿐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해방 프로젝트’는 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유럽·중동·아시아의 전통적 동맹국들의 지지를 다시 얻어 내어, 그 국가들이 이란에 압박을 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치솟는 유가를 낮출 유일한 방법은 ‘시작한 일을 끝내는 것’, 즉 이란을 상대로 전투를 재개하는 것뿐이라고 자신의 지지층을 설득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트럼프는 “미국은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미국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는 한국 국방장관 안규백을 만나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한 협력을 주문했다.

“[‘거대한 분노’를 언급한 뒤]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

‘해양자유연합’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파병 요청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트럼프의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신중한 검토”를 앞세워 시간을 끌어 왔다.

지금도 이재명 정부는 나무호 피격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나무호를 공격한 수단과 주체 규명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중 모드다.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뿔나게 나서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을 지켜보고 있을 뿐 따르지 않고 있다. 동맹국들은 걸프 지역으로 병력을 증강하지 않았다. 또,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기보다 공급망 위협을 분산해 왔다. 이것은 잠재적인 미국의 이란 전쟁 실패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현실주의적 국제 정치 논리에 따라 미국의 파병 요청에 선불리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해양자유연합’(MFC)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간 보고 있다. ‘해양자유연합’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양 안보 연합체다. ‘해방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해제하기 위한 기구다.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미국 전략의 두 축 가운데 하나다.

‘해방 프로젝트’가 미국이 군사력으로 선박 호위·구출을 시도하는 단기적·작전적 행동이라면, ‘해양자유연합’은 동맹국들의 외교, 정보 공유, 제재 집행, 해군력 지원을 결합해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려는 장기적·다자적 틀이다.

‘해양자유연합’이 단지 외교적 수단은 아닌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와 중부사령부가 공동 운영한다. 미국은 참여국에 ‘외교 파트너와 군사 파트너’ 중 어느 쪽이 되고 싶은지 확인한다.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는 물론, ‘해양자유연합’도 “외세 개입”으로 규정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해협을 탐내는 외국 세력은 바다 밑바닥 외엔 설 자리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미온적인 방식으로든 절대 미국의 이란 전쟁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극우 개혁당이 승리한 영국 지방선거 집권당 노동당이 자초한 패배

영국 지방선거에서 극우 영국개혁당이 최대 승자로 부상했다. 2024년 프랑스와 미국, 2025년 독일에 이어 또다시 극우/파시스트 세력이 중도계의 붕괴를 매우며 차기 집권을 노리게 된 것에 전 세계 인종차별주의자들과 극우가 고무받고 있다.

5,000석 이상을 선출한 이번 선거에서 개혁당은 의석을 2석에서 1,500여 석으로 비약적으로 늘렸다. 더욱이 2024년 총선, 2025년 지방선거(선거구가 이번과 달랐다)에서는 주되게 보수당의 선거구를 빼앗았다면, 이번에는 노동당의 오랜 아성인 '붉은 장벽' 지역을 다수 빼앗았다.

개혁당의 가장 큰 무기는 경제적 고통을 안긴 보수당·노동당 중도 양당에 대한 환멸을 이주민·무슬림 혐오와 결합시키는 것이다. 당대표 나이절 퍼라지는 런던 금융가를 기반으로 출세했으면서도 노동계급 저소득층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보수당 정부들과 노동당 정부들이 긴축을 자행해 온 허점을 찌르고 있다.

개혁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이주민 50만~60만 명을 임기 동안 추방하고, 이를 위해 미국의 이주단속반(ICE)을 본뜬 '강제 추방 사령부'를 만들고,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들을 가둘 수용소를 대대적으로 짓겠다고 했다.

이처럼 개혁당은 이주민을 줄이는 것이 긴축의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에 결국 그들 자신도 긴축을 집행한다. 지난해 지방정부에서 보수당을 밀어낸 지역들에서 개혁당은 공공보육 예산을 삭감했다. 일부는 시위에 밀려 삭감 계획을 철회했지만 말이다.

이스라엘

트럼프와 가깝다는 것을 자산으로 여기는 개혁당 대표 나이절 퍼라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직후, "이 사활적인 투쟁에서 미국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반발이 심하자 선거를 의식해 그 발언을 철회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 규제를 일절 반대한다.

이런 극우를 지지하는 데서 중도 정



영국개혁당은 영국판 ICE '강제 추방 사령부'를 신설해 이민·난민 수십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극우 정당이다

당들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특히 집권 노동당이 가장 혹독하게 심판받았다. 집권 노동당은 이번 선거로 잉글랜드 지방의회 68곳 중 40곳에서 다수당 지위를 빼앗기고, 100년 넘게 제1당이었던 웨일스에서는 제3당으로 밀려났다.

집권한 지 겨우 2년 만에 노동당이 심판받은 이유는 사람들이 기성 정치에 환멸을 갖게 만든 지난 정부들의 정책들을 본질적으로 변함없이 시행했기 때문이다. 겨울철 난방비 보조금과, 많은 노인들도 의지하는 장애인 지원을 삭감한 것이 대표적이다. 제국주의 질서 속 영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2015년 브렉시트 투표를 비난했다. 노동계급 사람들의 염원은 안중에 없었다.

그 대신 노동당은 극우한테 표를 뺏기지 않겠다고 인종차별에 타협했다. 강경한 이주민 탄압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것은 인종차별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고, 개혁당의 주장을 더 주류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극우를 저지할 동력을 제공할 반(反)극우 운동,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대해서는 탄압을 강화했다. 또한 '나크바' 주간에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겨냥한 파시스트 토미 로빈슨의 도심 행진은 허락했으면서,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은 불허하려 했다.

이런 정책들의 결과 현재 노동당의 지지율은 개혁당보다 약 10퍼센트포인트 뒤지고 있다. 다른 중도 정당인 보수당과 자민당도 마찬가지여서 현재 영국 정치는 1강 4중 구도다.(나머지 한 당은 이하에서 다들 녹색당이다.)

개혁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투표 분석가들은 개혁당이 이번 얻은 표가 대체로 옛 보수당 유권자 중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한편, 노동당이 개혁당에 의석을 뺏긴 많은 곳들도 노동당 표가 개혁당이 아니라 녹색당으로 갔다고 한다.

녹색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후 문제 뿐 아니라 이주민 환영, 팔레스타인 지지, 긴축 반대를 내걸고 선거를 치렀다. 급진좌파와 비슷한 면모를 내세워 노동당 왼쪽의 공백을 겨냥한 결과,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서 최근 16퍼센트까지 상승해 노동당, 보수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만약 영국 녹색당이 프랑스 급진좌파 '불복종 프랑스'처럼 중도 정당과의 연합을 위해 경합지에서 사퇴했다면 이런 좌경화 흐름이 축소되고 '노동계급이 인종차별을 지지한다'는 데 마고기가 힘을 얻었을 것이다.

불행히도, 영국 녹색당은 긴축과 제국주의에 일관되게 반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정당이다. 오랫동안 영국 녹색당은 노동계급과 서민에게 긴축을 강요해 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주 호전적이고 비타협적으로 지지한다. 녹색당의 전통적 지지층은 중간계급 전문직이다.

전통적인 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좌파적 대안을 제공하리라 기대를 모았던 제러미 코빈의 '당신의 당'은 겨우 50여 곳에서 입후보하거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데 그쳤다. 당 지도부가 노동당과 꼭 닮은 의회주의 노선을 관철시키는 데 골몰하느라 선거를 준비할 시간도, 더 중요하게는 지지자들도 잃었기 때문이다.

개혁당이 부상한 지금, 공식 정치권 바깥에서 인종차별과 극우에 맞서는 운동을 건설하는 과제가 더욱 시급해졌다.

연대체 '인종차별에 맞서 일어서자'(Stand Up to Racism)는 지역마다 인종차별 정책에 항의하고, 난민 숙소와 이주민 밀집 지역이 공격받을 때 방어하고, 3월 30일 50만 명 시위를 건설해 인종차별과 극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결코 소수가 아님을 드러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개혁당 낙선 운동을 벌여 몇몇 지역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인종차별 반대 활동에 더해, 노동당 정부가 강요하는 긴축과 전쟁에 맞서 노동계급의 공세적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 극우를 타격하고 진정한 좌파적 대안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하다.

김종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노동당 정부, 시장의 포로가 돼 자기 무덤을 파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총리 키어 스타머가 무능하고 거북살스럽고 우경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다. 그런 스타머가 이번 영국 지방의회,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 선거에서 노동당이 참패하자, 첫 대응으로 고든 브라운과 해리엇 하먼을 “특사”로 임명한 것은 상징적이다. 2010년 6월 총선에서 패배한 지난번 노동당 정부를 이끌었던 당대표와 부대표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다.

해리엇 하먼은 블레어주의 노동당의 오랜 출세주의자다. 2024년 7월 총선에서 코빈이 이즐링턴 노스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노동당 후보를 눌렀을 때, 코빈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영상이 하먼의 면모를 잘 드러낸다.(그 영상은 트위터에 널리 퍼진 바 있다.)

고든 브라운이 의심의 여지 없이 훨씬 중요한 인물이다. 브라운은 토니 블레어, 피터 맨덜슨과 함께 블레어주의 노동당을 처음 설계한 인물이다. 브라운은 1997~2007년 재무장관을 지내면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든 화해시킨다는 당시 노동당 프로젝트의 약속을 실행하려 했다.

현실에서 그 약속은 지극히 제한적인 사회 개혁을 시행할 여지를 얻어 낸다며 금융 시장을 달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브라운은 전임 존 메이저 보수당 정부가 설정한 정부 지출 목표와 세입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 블레어주의 노동당 정부 첫 임기가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브라운은 정부 지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화해시킨다는 블레어주의 노동당 프로젝트는 지극히 제한적인 개혁의 여지를 얻어 낸다며 금융 시장을 달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 스타머는 지난번 노동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총리 브라운에게 도움을 청했다

을 약간 늘렸다. 특히, 자금난에 허덕이던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

재무장관 시절 대부분 동안 브라운은 운이 좋았다. 당시 영국 경제는 비교적 빠르게 성장했다. 그 덕에 미취학 아동과 그 어머니를 지원하는 슈어 스타트 정책을 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성장은 두 개의 금융 거품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하나는 1990년대 말 주식 시장 거품이고 다른 하나는 2000년대 중반에 생겨난 주택 거품이다. 부유한 가구들은 자산 가치가 오르자 더 부유해졌다고 느끼고 더 많이 지출했다. 이는 수요와 고용을 북돋았다. 그러나 그 거품들은 폭증하는 부채로 커진 것이었고, 많은 경우 그 부채는 런던 금융가와 월스트리트에서 고안한 복잡한 금융 기법으로 은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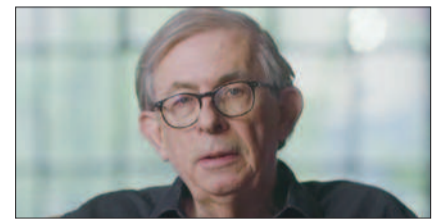
브라운은 그 거품을 키우며, 런던 금융가가 매우 “가벼운” 규제만 받는다

고 자랑했다. 그 후과가 2007~2008년에 돌아왔다. 주택 거품이 터지고 은폐된 부채가 드러난 것이다.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거의 한 세기 이래 최대의 금융 붕괴를 촉발했다.

붕괴

당시 브라운은 총리를 지내고 있었고, 자신이 일조한 난장판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가 내린 최악의 결정 하나는 당시 이미 명예가 실추돼 있었던 맨덜슨을 정부로 다시 불러들인 것이다. 맨덜슨이 그의 측근이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과 주고받은 서신을 보면, 맨덜슨은 영국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사익을 챙기는 데 더 골몰한 듯하다.

어쨌든 노동당은 그 붕괴의 정치적 대가를 치렀다.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끄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정으로 정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부가 교체됐고, 그 정부는 슈어 스타트 등의 복지 정책을 삭감했다. 그 후 경기는 쪽 침체했다.

현 시점에서 브라운이 스타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번 노동당 정부도 여전히 금융 시장의 손아귀에 있다. 2022년 가을 리즈 트러스 보수당 정부가 단명한 이래, 영국 국채 시장은 영국 정부에 언제나 위협적인 그림자를 드리워 왔다. 경제가 취약한 가운데 지출을 때우려다 보니 정부 차입이 급격히 늘었다. 그러자 영국 국채 투자자들은 더 높은 국채 금리를 더 요구했다. 그래서 영국은 예컨대 프랑스와 이탈리아보다 국채 금리가 훨씬 높다.

런던 금융가는 정부가 왼쪽으로부터의 압력에 밀려 지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에 의지하는 듯하다. 지난해 리브스가 사임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자 영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스타머의 측근들은 스타머가 경제에 강하지 않다고 시인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브라운을 기용해 국방비 증액에 대한 리브스의 반대를 우회할 방법을 찾아내려 한다.

이는 스타머가 궁지에 몰려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스타머 정부가 붕괴하고 있는 것은 탱크와 드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국 사회의 암울한 상태와 생활수준 압박 때문이다. 그 궁지에서 빠져나올 길은 시장에 복종하는 노동당의 노선과 단절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브라운은 스타머에게 그런 조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번역 이원웅

노동자 경제 투쟁은 중요하다

적잖은 좌파들조차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성과급)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특권'이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일부 또는 전부) 공유하기 때문이다.(좌파 중에서는 전국노동자정치협회와 노동자투쟁 등만이 분명하게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세상연구소의 홍석만 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삼성전자는 초과이윤이 아닌 평시에도 시장의 독점적 지배력과 원하청 종속 구조 속에서 독점이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원청 노동자들은 평시에도 독점이윤에 기반한 일종의 ‘독점 임금’을 받고 있다. ... 이 ‘독점 임금’은 독점 이윤과 마찬가지로 시장 불균형과 생산의 (착취에 기반한) 하청 종속의 결과로 이미 정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초과하고 있다.”

독점 이론에 근거한 이런 주장은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반면, 대기업 사용자와 정규직 사이에는 마치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정한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 등으로 ‘독점이윤’이라는 높은 이윤율을 누리는 반면, 경쟁이 치열한 하청 중소기업들은 낮은 이윤율을 누린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대기업들도 치열한 국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기업들은 지금까지 치열한 국제



노동자 투쟁에 이타주의를 기대하지 마라

경쟁 속에서 다른 기업들을 쓰러뜨리며 살아남아 왔다. 지금도 두 기업은 미국 마이크론이나 대만의 TSMC,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경쟁 압력 때문에 그들은 선진 기술로 비용을 절감하려고 막대한 자본을 설비 투자에 투입한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보다 생산비를 낮춰 (일시적인 데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

나 기술 혁신이 다른 기업들로 일반화 되면 초과이윤은 상쇄되고, 그러면 다시금 더 혁신적인 기술을 위한 막대한 설비 투자 경쟁이 이어진다.

수년 전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에 대거 사용되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기술 투자에 소홀한 사이에 SK하이닉스가 혁신 기술로 치고 나간 사례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조차 안정적 ‘독점이윤’을 거둘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당시 삼성전자는

2023년 영업이익이 급감해 적자에 빠지면서 ‘위기설’까지 나오기도 했다.(법인세 0원)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경쟁이 이처럼 치열한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이 하청 노동자들 몫을 가져간 ‘독점 임금’이 아니라 노동생산성 증대에 따른 단위노동비용 절감 덕분임을 보여 준다. (그것은 노동자 한 명이 생산하는 가치가 크다는 뜻이다.)

실제로 여러 통계를 살펴보면, 제조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중소기업보다 높지만, 대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또한 국제적으로 치열한 기술 혁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기업 경영자들이 핵심 정규직에게 높은 ‘독점 임금’을 주고 나머지는 차별하는 노동계급 분할 전략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는 뜻도 된다. 날로 격화되는 국제 경쟁 때문에 정규직에게 그런 혜택을 베풀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기업주가 하청 노동자들을 초과 착취한 결실을 나눠먹기는커녕,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잉여노동을 착취당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처럼 착취 관계 속에서 똑같이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 노동자들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로 조건이 다르더라도 단결할 수 있다.

반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독

포럼

전쟁, 혼돈의 세계, 저항

12:30 - 14:45

가자에서 이란까지: 미국-이스라엘의 전쟁과 저항

소니아 재한 이란인 마르얌 재한 팔레스타인인 김지윤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15:00 - 16:30

동아시아는 다음 전장이 될 것인가? 미·중 패권 경쟁, 동아시아, 한반도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17:00 - 19:00

트럼프, 제국주의의 위기, 좌파의 과제 온라인 발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리더

5월 16일(토) 오후 12:30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주최 노동자연대

더 많은 정보 & 참가 신청

ws.or.kr/forum0516

참가비 (하루) **20,000원**
대학생, 이주민·난민 **14,000원**

• 전문 통역사의 영어·아랍어 통역 제공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들

- ▶ 참가자들이 의견 나누고 소통하는 청중토론 시간
- ▶ 팔레스타인인과 이란인에게 직접 듣는 생생한 이야기
- ▶ 세계 석학이자 혁명적 좌파인 캘리니코스의 통찰과 전망
- ▶ 포럼 주제 관련 도서를 할인된 가격에 만날 기회

문의 010-4909-2026 (문자 가능)
wsorg@ws.or.kr

점 임금' 탓에 하청 노동자들이 저임금일 수밖에 없다고 보면(제로썸), 두 집단 사이에 단결은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노동계급 단결을 위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을 억제해야 한다는 도덕주의로 이끌리게 된다.

도덕주의

이 때문에 일부 좌파들(홍석만과 이용덕 씨 등)은 삼성전자 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과급 대폭 인상 같은 자신들의 임금을 올리는 요구가 아니라 더 열악한 부분의 임금을 개선하는 요구를 채택해야만 그 투쟁을 지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조건부 지지").

예컨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성과급 지급' 요구를 채택해야만 한다면, '초과이윤세' 도입으로 삼성전자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채택해야만 지지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제 처음 투쟁에 참여해 보는 노동자가 상당수인 삼성전자 노조가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내걸고 투쟁에 나설 수 있다면(이건 정치적 투쟁이다), 좌파가 굳이 노동자 사이의 반목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한편, 개별 대기업의 조건 개선 투쟁을 노동계급 전체는 생각하지 않고 노동계급 내 격차만 키우는 이기적인 투쟁이라고 보는 다른 일부 좌파들은 이 투쟁에 대한 지지 자체를 아예 꺼림칙해 한다. (이런 논리로 심지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도 다른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늘리는 것이라 보고, 지지를 기피하기도 한다.)

물론 특정 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느 시점에서 격차를 증대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임금 격차는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특정 부문의 노동자 투쟁이 제한적 성과를 거두더라도 그 결과가 다른 부문의 노동자 투쟁에 고무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봐야 한다.(물론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정치는 우리가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개혁주의 문제와 관계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요구를 채택하기를 바라는 것은 상향 평준화를 바라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고려하게 만들려 해도 도덕주의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역학을 적용해야 한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조건을 지키고 삶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내몰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의식이 변하고, 연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즉,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의식이 가장 잘 바뀔 수 있다.

게다가 '초과이윤세'처럼 전체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개혁입법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이윤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노동자들이 그 투쟁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초과이윤세'나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 등을 삼성전자 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급 인상 요구와 대립시킬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이타적 투쟁을 기대하는 것은 도덕주의적이다 못해 공상적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연대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이 성과를 낸다고 해서 그들 모두에게서 고르게 계급의식이 성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계급의식의 불균등 발전).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경험을 파편화시키고 자본가·언론·정부 등은 갖가지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약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래서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일관된 반자본주의 좌파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려면, 특정 경제투쟁에서 한발 떨어져 '전체 노동계급을 생각하라'고 훈수나 들 게 아니라, 그 경제 투쟁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연결하고 그들 자신도 저항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좌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요구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자생적' 요구를 대립시킬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일단 무조건 지지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비판할 게 있다면(혁명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있다), 투쟁의 건설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강동훈

이렇게 생각한다

독점 이윤 이론과 정규직 특권론

[요점] 홍석만 등의 주장은 현대적 의미의 노동귀족론과 맞닿아 있다. 독점 자본이 누리는 초과 이윤의 낙수효과가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내부자'들에게만 집중되면서, 노동계급 내부에 견고한 위계와 성벽이 쌓였다고 보는 관점이다. 독점 이윤 이론과 정규직 '특권'

론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좌파 이론은 '노동귀족'론이다. 노동귀족론은 두 개념을 잇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 구조를 가졌는지, 그리고 좌파 내부에서 이 이론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1. '독점 이윤의 공유'가 논리의 핵심

이 이론의 핵심은 대기업(독점 자본)이 벌어들이는 초과 이윤 중 일부가 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분배'된다는 점에 있다. 곧, 거대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평균 이상의 이윤을 얻는다(독점 이윤의 발생). 그러면, 자본가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마하거나, 숙련된 노동력을 안정적

으로 확보하기 위해 독점 이윤의 일부를 임금이나 복지 형태로 노동자에게 '넘겨준다'(이윤의 일부 이전). 결과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노동의 가치 이상의 '지대'적 이익을 누리는 '특권층'이 된다(특권의 형성). 독점 이윤의 발생 → 이윤의 일부 이전 → 특권의 형성

2. '노동귀족'론

노동귀족론은 역사적으로 크게 두 단계로 발전했는데, '정규직 특권'론은 주로 현대 한국적 변용에 해당한다. 고전적 노동귀족론은 제국주의 국가의 자본가들이 식민지 수탈로 얻은 초과 이윤을 자국 노동자 상층부에게 나눠 줘, 그들을 체제 내로 포섭한다(개혁주의화)는

이론이다. 현대적 노동귀족론(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론과 결합됨)은 한국 좌파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으로,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착취의 파트너가 됐다고 비판하는 논리다.

3. 좌파 내부의 차이

그런데 좌파 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주로 사회민주주의와 일부 NGO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사회연대임금"이나 "하청 단가 후려치기 방지" 등을 위해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논리로 흔히 이어진다.

이런 개혁주의에 맞서 그동안 우리는 첫째, 착취의 주체를 혼동하지 말라고 주장해 왔다. 노동자가 받는 높은 임금은 자본이 잉여가치를 더 많이 추출하기 위한 생산성 강화의

결과일 뿐, 다른 노동자를 착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둘째, 우리는 자본의 인간질에 넘어가지 말라고도 촉구했다. '노동귀족'이나 '정규직 특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본가가 노동계급의 단결을 깨기 위해 만든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노동귀족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온건화를 설명할 때, 임금 차이보다는 노동조합 관료(주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힘에 대한 일말의 환상도 금물이다

김문성

지난 두세 달간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을 겪어 왔다. 표면상 장동혁 지도부의 극우 노선에 대한 논란 같았지만, 국힘 내의 반발은 원칙있는 반극우가 아니었다. 그저 지지를 저조에 대한 책임 공방이었다. 지방선거 이후 차기 당권 다툼 전초전인 셈이다.

그래서 최근 영남권에서 “미워도 다시 한 번” 바람이 일며 국힘 중심 결집이 일어나고 수도권으로도 그 영향이 미칠 듯 하자, 국힘은 (여전한 상호 불신 속에서) 장동혁 체제 아래서 점차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비상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떠들었던 장동혁은 최근 “계엄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혼란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다”며 기회주의적으로 물타기 하는 발언을 했다.

장동혁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앞잡이 팀이었던 이진숙·김태규를 나란히 대구 달성, 울산 남구갑 등 당선 유력 지역구에 공천했다. 윤석열 심복 이용도 경기 하남갑에 공천됐다. 그들 모두 계엄 옹호자(“윤어게인”)들이다.

윤석열·한덕수와 통화 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주요임무종사죄”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를 대구시장에 공천한 직후였다.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국힘 자체가 하나의 정당으로서 윤어게인에 연루됐다. 재공천된 국힘 현역 단체장 11명 전원이 지난해 윤석열 체포와 탄핵(파면)에 합동으로 반대했었다. 장동혁에 반발한 오세훈, 박형준이 포함된다.

현재 국힘 광역단체장 후보 7명(부산 박형준, 울산 김두겸, 대구 추경호, 인천 유정복, 세종 최민호, 강원 김진태, 경북 이철우), 기초단체장 후보 4명(경기 성남·광명·포천, 강원 원주)이 윤석열을 옹호했던 극우 김문수를 명예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국힘 유의

동은 중도 보수를 자처해 왔는데, 이번에 김문수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전광훈·전한길의 지지를 받은 황교안(자유와혁신)과의 단일화를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황교안은 합당을 단일화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힘에서 쫓겨나 부산북갑에 무소속 출마한 한동훈은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악명 높은 공안 검사 정형근을 후원회장에 앉혔다. 정형근은 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 파견 시절, 잔혹한 고문 기법으로 김근태 전 장관을 고문후유증으로 몰아간 이근안 등을 지휘한 고문 수사로 악명 높았다. 윤어게인을 비난하던 ‘전어게인’을 한 것이다. 한동훈은 비난이 일자, 정형근이 지역 사정을 잘 안다고 군색하게 변명했다. 정형근은 부산북갑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었다.

계엄군 현장 지휘관이 국회의원 출마

국힘 지지율은 여전히 민주당에 뒤지지만, 광역별 편차가 크다. 전국 평균 지지율로는 선거 결과를 단정하지 못한다. 만에 하나, 지지층 결집으로 국힘이 영남 5곳을 씩씩이하고 다른 한두 곳만 견져도 극우 지지자들은 고무될 것이다.

선거 직전이 되자 당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달 전에만 해도 국힘은 대구시장 선거에서조차 밀리는 듯 보였는데, 이제는 영남권에서 모두 국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따라잡거나 앞선다. 서울에서도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민주당의 공천들이 대중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어서다.

국힘 바깥 극우도 목소리를 높인다. 12·3 쿠데타 당시 국회에 출동한 특전사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가 전한길의 지지 속에 인천 계양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내란 청산이 얼마나 부실하면, 실탄 든 총을 들고 출동했던 자가 재판 중에 국회의원 출마를 할까.

또한 지난해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인종 차별과 혐종 공약을 남발했던 자유통일당 이강산이 오세훈이 못 미답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런 자들은 선거운동을 쿠데타 지지, 인종차별, 혐종, 반노동, 반좌파, 반페미니즘을 공공연히 선동하는 장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자들의 득표는 하나하나가 반동의 탄환이다. 한 표라도 덜 받도록 돼야 하는 이유다.



하나의 정당으로서 국힘 자체가 윤어게인에 연루됐다

왜 극우의 주류화가 지속되는가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힘으로 우파층 결집이 일어나는 것은 극우의 주류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극우의 주류화를 촉발시킨 것은 12·3 친위 쿠데타 기도였다. 쿠데타 세력 청산 투쟁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다.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명분이 윤석열 쿠데타의 실제 목적이었다.

경제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이데올로기 위기와 미·중 갈등이 초래한 국제 질서의 불안정 효과는 주류였던 중도 세력의 정치적 위기를 불러왔다. 위기를 극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극우가 성장하는 원인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정부의 권위주의적 억압 조처들이 늘어나고, 프랑스, 영국, 인도 등의 선거에서 드러나듯 극우 세력이 중도 몰락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한국도 이런 국제적 정치 위기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쿠데타가 실패해 (터디고 무르기 짝이 없지만) 법적 단죄 중인데도 극우의 주류화가 계속 진행 중인 것이다.

국힘은 미국 트럼프 극우 정부의 지지를 받아 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도 배우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중도와 상식의 힘을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좌파가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의 정치적 동맹·공조로 국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큰 실수다.

극우는 민주당의 타협주의를 이용해 성장한다

한국의 민주당도 언제나 정치 위기의 대안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였다. 한국 극우의 가장 최근 성장(윤석열의 집권을 포함해) 요인을 따져 봐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과 위선이 낳은 분노와 환멸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사실 윤석열 탄핵 운동이 박근혜 탄핵 운동만큼 크지 않았던 것에는 여전히 그 환멸이 크게 남아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서민층 청년 세대의 대안 부재감도 그 환멸의 영향을 받았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펼친 정책도 별로 진보적이거나 친 서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이 정부의 실천에 반영된 것은 유가 최고치 통제 등을 빼면 손에 꼽을 정도다. 정치 질서의 안정을 더 중시하다 보니 쿠데타 세력 숙정도 불충분하다.

▶ 9면으로 이어짐

선거를 쿠데타 지지, 인종차별, 반노동, 반좌파, 반페미니즘을 선동하는 장으로 삼을 극우의 득표는 하나하나가 반동의 탄환이다

반환점 돈 2차 종합특검

윤석열 쿠데타 기도의 계획성과 잔혹성이 새삼 드러나다

2차 종합특검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며칠 만에 실행된 우발적 행위라 아니라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쳤고, 매우 잔혹했음이 드러났다.

최근 특검은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이전에 작성된 방첩사 내부 문건도 확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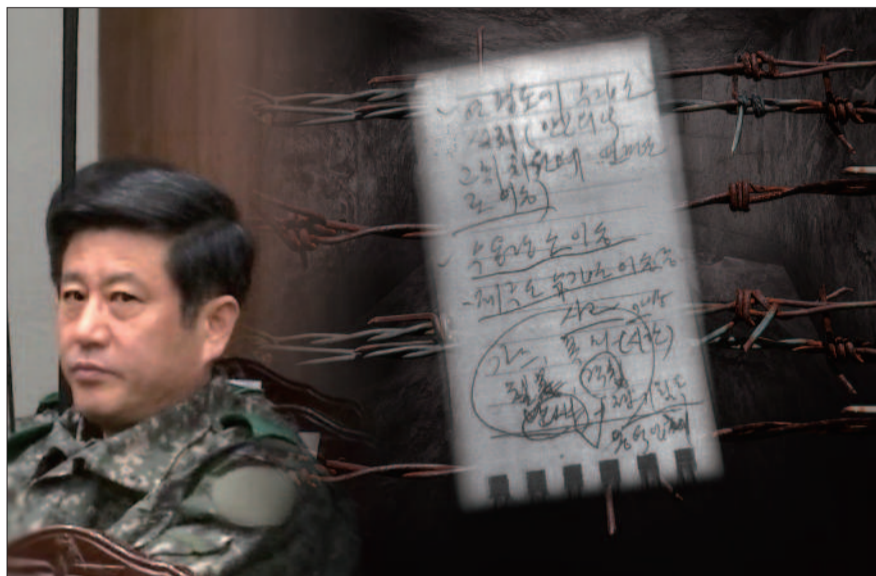
MBC 보도를 보면, 그 문건에는 방첩사 지휘 하에 군사경찰(옛 헌병대)과 경찰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려 한 내용이 있다.

2024년 6월 28일에는 방첩사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안보수사 MOU를 맺었는데, 특검은 그것이 계엄 준비였다고 의심한다.

〈한겨레〉는 방첩사가 사령관 여인형의 지시에 따라 계엄 발령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임무 수행 훈련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그 훈련은 2024년 3월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실드’에서 진행됐다.(미국이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수용소, 지하 갱도, 철창

윤석열이 “이틀 전 계엄 결심”했다는 지극연 재판부의 얼토당토않은 판단과 달리, 현재까지 2차 종합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추가 정황들은 윤석열이 최소한 9개월 전부터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다시금 보여 준다.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좌파를 겨냥한 것이었다

노상원 수첩 속 ‘수거’(제포)와 ‘수집소’(수용 시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5월 6일 특검은 연평도 수용 시설을 현장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수용 시설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고 다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지하 갱도 등 물적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특검은 밝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연평도 수용 시설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 시설 18곳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검은 서울 관악구 소재 수도방위사령부의 수용 시설도 현장 검증했다. 계엄 직후 이미 수방사 내 B-1 병커가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뒤 구금하려 한 장소로 알려졌는데, 이제야 현장 검증이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성공했다면 해당 수용 시설들에서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노상원 수첩에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을 포함해 법관, 공무원, 언론인,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등 500여 명이 ‘수거 대상’으로 돼 있었다.

또, 그 수첩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수용 시설에 화재, 폭파” 등이 적혀 있었다. 군을 동원해 반대자를 가차없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군사 쿠데타의 핵심 목표의 하나다.

용두사미

이토록 끔찍한 일을 벌이려 한 쿠데타 세력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하지만 방첩사는 정권 교체 후에도 이전 정부들에서 하던 사찰 임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JTBC 보도들을 보면, 방첩사에서는 올해 초에도 군 내부 계엄 반대자를 색출하기 위한 정보 수집 지시가 있었다. 지난 3월 방첩사 요원이 국민의힘 해산과 조희대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방첩사 외에 다른 국가기관들에서도 숙정되지 않은 쿠데타 부역자들이 따리를 틀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의 안정(연속성)”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면서, 쿠데타 세력 청산의 과제를 일관되고 철저히 밀어붙이지 않아 왔다.

오히려 쿠데타를 옹호한 국힘 정치인을 정부 요직인 기획예산처 장관에 내정하기도 했다. 반발이 커서 철회하긴 했지만, 그런 인사는 국가기관들에 청와대가 전면적 내란 청산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가 됐을 것이다.

2차 종합특검의 앞날도 밝지만은 않다. 반환점을 돌았지만 5월 10일 현재까지 구속·기소자는 아무도 없다. 외환유치에 대한 수사·처벌은 2차 종합특검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그러는 사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추경호, 계엄군 지휘관 김현태 같은 쿠데타 동참자들이 선거 출마까지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다.

이재혁

▶ 8면에서 이어짐

오히려 현 정부 아래서 경제 성장, 방위산업 강조, 한미동맹 중시 등 우파의 전통적 의제가 실천돼 왔다. 높은 지지율도 주식시장 활황과 유가 규제, 서민 지원금 풀기 덕분이라 조만간 거품이 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통령 자신이 윤석열의 사람들, 심지어 계엄 옹호자들을 청와대와 내각에 임명하려 했었다. 그러니 고위 관료 집단은 물론이고 군·검찰·경찰·국정원 등에서 실질적인 숙청이 진행되기가 힘들다.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중 2명이 국힘 출신이고, 평택을 재선거에도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을 비난했고 윤석열 대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김용남을 공천했다.

국힘 출신자들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여론 조작을 위해 댓글 공작을 사주한 죄로 구속돼 경남도지사를 중도 사퇴했던 김경수를 다시 경남도지사로 공천했다. 민주주의 염원에 대한 배신이다.

트럼프의 아들이 주도하는 미국 극

우 조직과 유착한 김부겸을 대구시장에 공천한 것, 거액의 가상 자산을 보유해 코인 투기 의혹을 받은 김남국을 경기 안산갑에 공천한 것 등은 대중의 진보 염원을 무시한 것이다.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가까스로 출마했지만 부패한 극우 기업 조직 통일교 유착 의혹이 풀린 상태는 아니다.

국힘과 극우 후보들이 참패하길 바라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와 표 몰아주기로는 서민층과 청

년 세대에게서 내란 청산, 극우 반대, 사회 개혁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물론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도 단 한톨의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극우에 맞서려면, 노동자 투쟁, 반제국주의 운동, 이주민·난민 환영 운동 등이 성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 운동이 현재의 복합·다중 위기를 해결할 힘을 보여 줘야 한다.

말기 암 난민의 희망: “마지막 소원은 가족을 한 번 안아보는 것...”

인의협 지원에도 가족 재회 무산되며 사투 중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한 난민이 한국 정부의 배척적 난민 정책으로 인해 더한층 고통을 겪고 있다. 전문 아랍어 통역가이기도 한 본지 박이랑 기자가 이집트인 난민 A 씨(54세)의 사연을 직접 들었다.

A 씨는 이집트에서 2013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현 엘시시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집트 당국의 탄압을 받았다. 이집트 당국이 A 씨의 동료들을 체포해 고문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을 알아낸 것이다. 경찰이 A 씨의 집을 찾아와 가구를 부수고 가족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2013년 A 씨는 탄압을 피해 이집트를 출국했다. 몇 년간 인접한 수단과 튀르키예 등을 전전하던 그는, 2018년 한국에 와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한국 법무부는 A 씨에게 난민 불안정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했으나 2022년 최종 패소했다. 한국을 떠나 달리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A 씨는 난민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과 헤어진 채 오랫동안 난민 신청자라는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저에게는 아내와 여섯 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던 것은 저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줬습니다.”

“저는 또한 과거 공장에서 일하던 중 산업재해를 겪었고, 한국에서 여러 차례 치료와 힘든 신체적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 외로움, 두려움, 감정적 고통, 가족과의 분리, 그리고 오랜 기간 겪어야 했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제 몸은 점점 약해졌고 면역체계 또한 심각하게 약해졌습니다.”

앞친 데 덮치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A 씨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다. 간세포암 4기 진단을 받은 것이다.

“제 상태가 그렇게까지 심각해졌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습니다.”



3주마다 740만 원 난민 A 씨에게 청구된 항암 치료비 영수증. 난민은 건보 가입이 매우 어렵다

병을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채 4기까지 진행됐다는 사실은 저에게 깊은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 줬습니다.”

게다가 A 씨는 엄청난 액수의 항암 치료비를 청구받았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치료비 총액이 7,200만 원이 넘는다.

“약 3주마다 치료비가 740만여 원에 달했고, 이는 제 경제적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난민 신청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막고 있다. 직장가입은 허용하지만, 난민 신청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일자리에 취직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취업이 허용되는 직종이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복잡한 취업 허가 절차도 취업을 어렵게 한다.

A 씨처럼 상당수 난민 신청자가 장기 체류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사실상 막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이다. 난민들이 못 견디고 한국을 떠나도록 압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A 씨는 과거 공장에서 일할 때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그러나 난민

재신청을 하자 출입국 당국이 A 씨의 체류 자격을 박탈했고,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되면서 건강보험 가입도 불가능해졌다.

“[체류 자격 박탈 이후] 3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는 임시 스티커(출국 기한 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절차도 매우 힘들고 굴욕적입니다. 매번 만료 하루 전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가서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 일주일 후 다시 오라고 하며, 그때 갱신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 체류 상태가 시스템상 만료된 것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서비스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한국에서 휴대전화 없으면 이동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길 안내를 이용하거나, 병원과 소통하거나, 심지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삶은 저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고 극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A 씨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부인과 자녀들이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A 씨는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

A 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에 도움을 줬고, 인의협 대전충남세종지회가 항공료와 한국 생활비를 모금해 줬다.

올해 2월 드디어 부인과 가장 어린 딸 2명의 한국행 날짜가 다가왔다. A 씨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인천공항에서 A 씨 가족을 맞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당일 이집트에서 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집트 당국이 공항에서 A 씨 가족의 여권을 빼앗고 출국을 막은 것이다. 부인의 여권에 A 씨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화근이었다.

A 씨 이름을 조회한 이집트 당국은 A 씨 부인을 국가보안부로 연행해 출국 목적 등을 캐물으며 3시간 넘게 취조했다고 한다. 눈앞에서 어머니가 연행되는 것을 목격하고 공항에 방치됐던 어린 두 딸은 충격에 빠졌다.

“제 아내와 딸들이 저를 만날 희망을 품고 카이로 공항까지 갔다가 강제로 발을 돌려야 했을 때, 제 정신 상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의 하나였습니다.”

암 진단 후 A 씨는 한국인과 아랍인 지인들, 여러 시민단체들의 재정적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A 씨를 도와주던 단체들과 병원도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돼, 5일 전부터 치료를 중단한 상황이다.

A 씨는 이집트의 가족들에게 보내주던 생활비도 더 이상 보낼 수 없어, 이집트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두 채 중 하나를 팔아 가족들의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

몰인정한 한국 정부

그가 법무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가짜 난민’이라면, 왜 암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가족을 만나러 이집트로 귀국하지 않을까?

▶ 11면으로 이어짐

부산대 강사 강사·교수·학생 200명이 강사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행진하다

5월 7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 강사들의 투쟁에 연대하고자 강사와 교수, 학생 등 200명가량이 부산대 본관 앞에 모였다. 시간당 강의로 3퍼센트(3,000원) 인상을 요구하며 강사들이 천막농성을 벌인 지 130일째 되는 날이었다.

부산대 안팎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강사의 생활임금 보장하라,” “강사의 노동조건은 학생들의 수업조건!” 등의 구호를 외치며 2시간 가까이 학내를 활기차게 행진했다.

부산대는 5월 15일 개교 8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강의 중 35퍼센트를 책임지는 비정규교수의 공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산 부족을 핑계로 강사의 고향을 짜내 외형적 지표 부풀리기에만 여념이 없다.

노조와 부산대 당국은 그간 몇 차례 교섭을 했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강의로 3퍼센트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부산대에서 14년째 비정규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양창아 강사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임금을 인상하라는 기본적인 룰”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말한다.

“3,000원 오른다고 해서 크게 뭐 나아지는 건 아니예요. 하지만 그 룰을 제대로 지켜야만 우리 임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교수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학교가 인정하는 거



“시간당 강의로 3퍼센트(3,000원) 인상하라” 연대가 결집된 5월 7일 부산대 학내 집회

라고 생각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강사가 생계를 위해 공사장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환경에서 ‘명품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강의로 3퍼센트 즉각 인상과 함께, 정부의 강사 처우 개선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행진에는 부산대 강사들을 비롯해 강사가 많이 참가했고, 정규직 교수도 여러 명 참가했다. 학생들도 눈에 띄게 많이 참가했다. 학생의 지

지는 강사에게 큰 힘을 주기에 무척 반가웠다.

한 부산대 학생은 친구 여러 명과 같이 행진에 참가했다. 겨울에 시작한 농성을 지금껏 학교 측이 무시하는 것에 분노해서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견 할 짓이 아니다. 이거는 연대를 하지 않고는 발을 뺄고 못 자겠다 싶어”서 동참하게 됐다.

“교수님들이랑 강사님들이 똑같이 저희에게 수업을 제공해 주시고 똑같이 저희를 보듬어 주시기도 하고 저희

가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도 해주시는데, 누구는 교수 이름표 달고 누구는 강사 이름표 달았다 밖에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차별받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진은 부산대 강사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가 커졌음을 보여 주었다. 부산대 강사들이 이날 행진에서 힘을 얻어 투쟁력이 더 커지고, 연대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

정진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

▶ 10면에서 이어짐

법무부와 법원의 난민 불인정 결정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난민 제도를 “남용”한다며, 난민 신청과 재신청을 제약하도록 난민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1퍼센트대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A 씨는 앞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모든 인간이 의료, 안정된 삶,

의사소통,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4기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년 동안 안정된 체류 자격 없이 불확실한 상태로 살아가며 건강보험이나 통신 서비스, 계속 치료받을 권리 같은 기본권을 잃을까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삶은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 냅니다.

“저는 암 4기 투병 중이라, 아내와

여섯 딸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보거나 안아 줄 수도, 평범한 일상을 함께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 역시 투병 중인 제 곁을 지킬 수 없습니다. 때때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모두 잃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사치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인도주의적 체류 자격을 받아 인간다운 존엄 속에서 살아가고, 치료를 계속하며, 남은 삶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중국 문화혁명 60주년 사회주의와 무관했던 관료들의 권력 투쟁이 본질이었다
- ★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침묵하면 ‘운 나쁜 사고’로 묻힐 것” - 고등학생 성명 물결
- ★ 《루이즈 미셸 회고록》 소개 파리 코뮌의 여성 혁명가 루이즈 미셸의 삶

사진 출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재한 레바논인이 말한다

“항전과 단결 때문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에 서 씨름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가옥을 수백 채씩 파괴하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등 주요 지역을 대대적으로 폭격하고 있다.

재한 레바논인 기와 씨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의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할 뿐 아니라 화학 무기를 동원해 모든 생명, 심지어 미생물까지도 말살하려 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난가을 한국에 온 기와 씨는 이스라엘이 봉쇄된 가자지구를 공격한 2009년에 고등학생으로서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처음 접한 이래, 레바논과 영국 등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참가해 왔다. 그녀는 오는 5월 17일(일)에 상경해 ‘나크바 78년 집중 행동의 날’ 집회(‘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전략은 ‘전투원’을 조준한다며 그 전까지 안전하다 여겨지던 [그래서 레바논 남부 사람들이 피란해 있던] 동네·도시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공격으로 기와 씨는 가장 친한 벗이자 친척인 가디르 씨를 잃었다. “가디르는 변호사이자, 레바논·팔레스타인 전쟁 피란민들을 지원하는 활동가였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도 피란민들을 위한 의약품을 마련하는 일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기와 씨는 이 공격에 “피란민은 모두 잠재적 위협이라는 생각을 조장해 레바논 사회에 균열을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레바논인은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거의 반반인데, 이런 사회적 구성이 정치 기구에도 반영돼 의회 의석도 종교·종단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레바논 사회는 특히 전쟁 중처럼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균열이 생기기 쉬운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균열을 더 키우려는 것입니다.”

기와 씨는 레바논 사회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타격을 입었을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도 다양한 연령·출신·종교의 자원 활동가들이 계속 힘을 합쳐 기금을 모으고 피란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 정부보다 훨씬 훌륭하게 그런 일을 해내고 있어요. 조직화된 엔지오가 아닌 자원 활동가들인데도요.”

“제 여동생 라하프도 친구들과 자활 단체를 결성해 난민을 지원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 사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 세대는 이스라엘이 획책하는 내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와 씨는 현 정부가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을 추진하려는 것에 상당수 레바논인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레바논 사람들의 피를 손에 묻힌 범죄 국가[이스라엘]와 손

을 맞잡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기와 씨는 이스라엘이 트럼프의 이란 전쟁을 기회 삼아 “오랫동안 떠돌던 ‘대(大)이스라엘’ 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이란이 광신에 기반한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이 ‘약속의 땅’ 운운하며 팔레스타인 점령과 레바논 침공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저는 ‘이스라엘 비판이 곧 유대인 혐오’라는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짚고 싶습니다. 저희 레바논 사람들은 유대교와 시온주의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극단적 팽창주의입니다.”

차질

이어서 기와 씨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이미 차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레바논 언론 보도와 많은 군사 분석가들이 밝히듯, 특히 지난 2~3주간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서 드론으로 이스라엘군 기지와 탱크를 공격해 매일같이 사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언론조차 이스라엘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도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 철군 압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와 씨는 팔레스타인·레바논 바깥

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할 일이 있다고 역설했다. “세계가 이스라엘에 충분히 맞섰더라면,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 가디르와 지금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기와 씨는 자신이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리 팔레스타인인·레바논인들은 긍지가 있고, 수천 년에 이르는 역사적 유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동참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우리의 목소리를 억압할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권력과 돈이 인류애를 짓밟을 때 우리가 다시 인류애를 믿을 수 있도록 연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영국에 거주할 때도, 2023년 10월 7일 이후 대규모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동안 런던 시위 대부분에 참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팔레스타인 상황을 세상에 알리려 노력해 왔습니다.”

“식민 지배를 한 역사가 없고 식민 점령의 고통을 겪은 역사가 있는 한국인들도 일요일 집회에 참가해 땅과 삶과 꿈을 되찾기 위한 우리의 외침을 함께 외쳐 주세요.”

김준호